

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

2024. 4. 29 | 중장기전략위원회
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



초저출산

'15년이후 출산율 급락, '23년 0.72명(세계 최저), '36년에나 1명 회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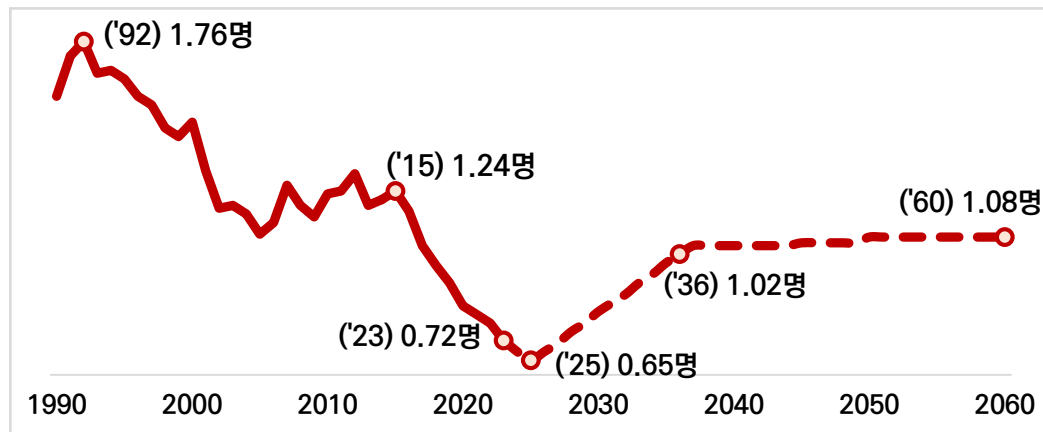
인구 감소

생산연령인구 '20년부터 감소 전환, '60년까지 1,588만명 추가 감소

고령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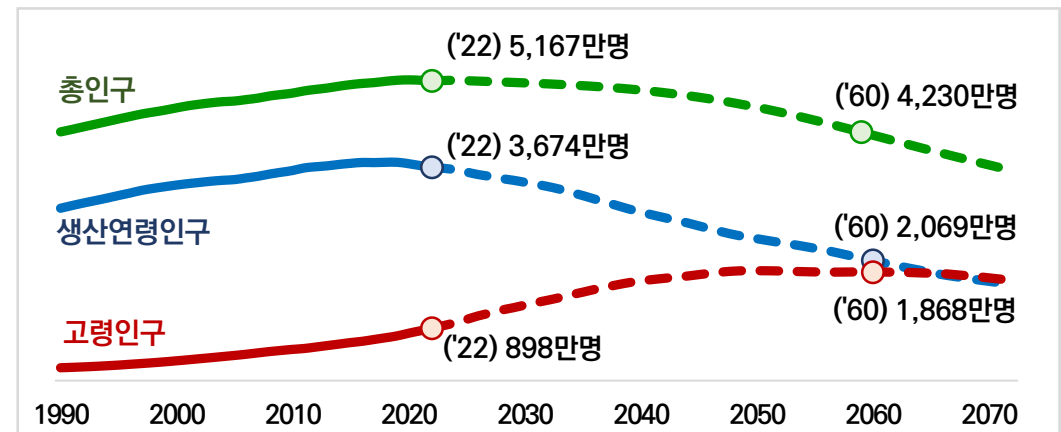
'25년 초고령사회 진입, 노년부양비 급등 ('66년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 부양)

합계출산율 추이 및 전망



* 자료: 통계청

인구 추이 및 전망



* 자료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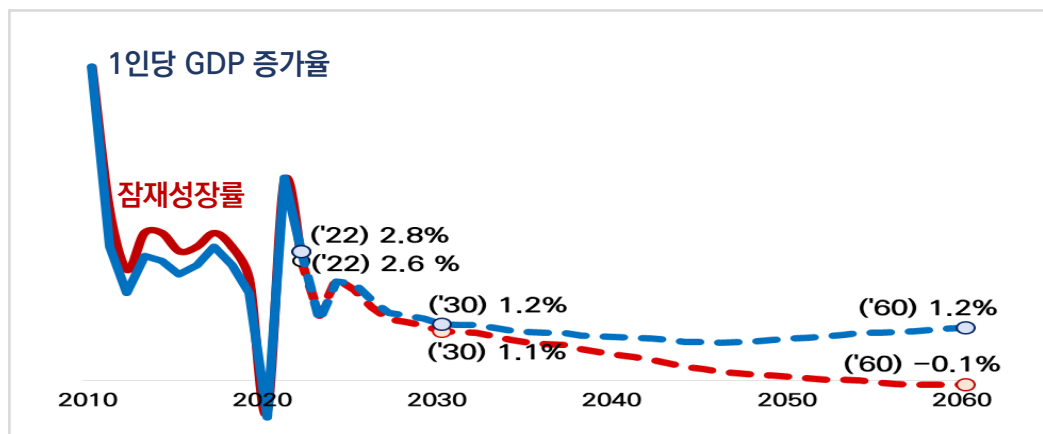
수요 · 공급 · 자산시장 위축으로 0%대 저성장 우려

- ✓ **공급** 노동공급 감소·생산성 저하로 잠재성장률 하락 * 노동생산성 전망(KDI, '23, %): ('11~'19)0.9 ('23~'30)0 ('31~'40)△0.3 ('41~'50)△0.7
- ✓ **수요** 고령화에 따른 소비감소 + 자본생산성 저하로 투자 위축 * 고령화로 '20~'35년 소비 감소(한은, '22): 연평균 △0.7%, 누적 △10.6%
- ✓ **자산시장** 부동산 시장(장기 주택수요 감소) 및 혁신·모험자본 투자 위축 우려 * OECD 국가, 고령화 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자산 투자비중 감소(한은, '17)

고령화로 1인당 소득 증가율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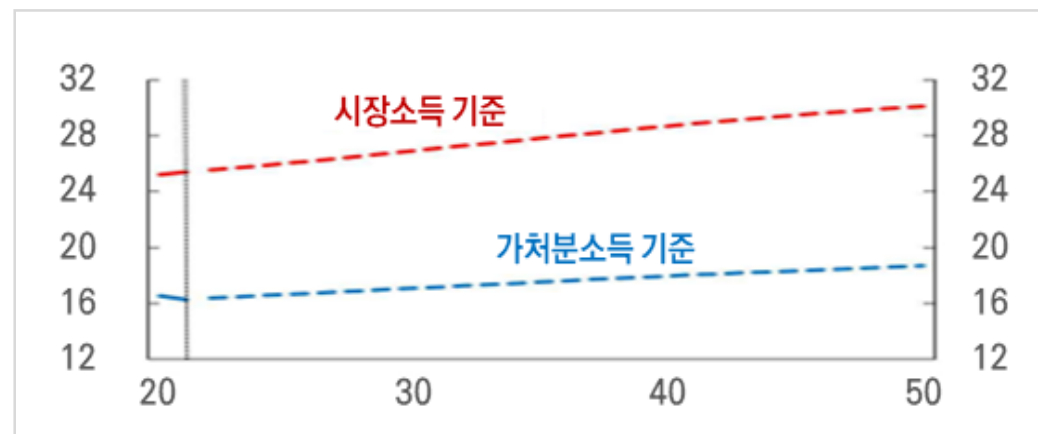
고령화로 소득불평등 심화 ▶ 연령 증가에 따라 소득수준 결정요인(교육 등) 누적·심화 + 고령층 비중 증가

잠재성장률 및 1인당 GDP 증가율 전망



* 자료: 통계청, KDI

고령화에 따른 소득불평등도¹⁾ 전망



1) 타일지수(지니계수와 같이 소득불평등도 지표로 클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것을 의미)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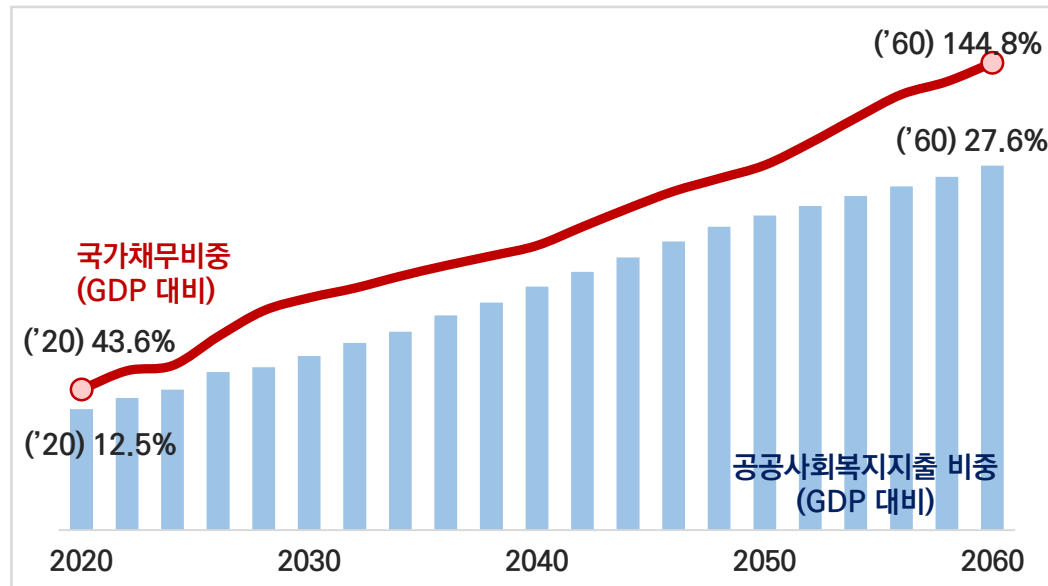
* 자료: 한국은행('23)

재정·복지·지역 지속가능성 악화

- ✓ 국가채무 증가, 국민연금기금 고갈('55), 건강보험 적자 전환('23) → 미래세대 부담 증가
- ✓ 인구감소 +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소멸 위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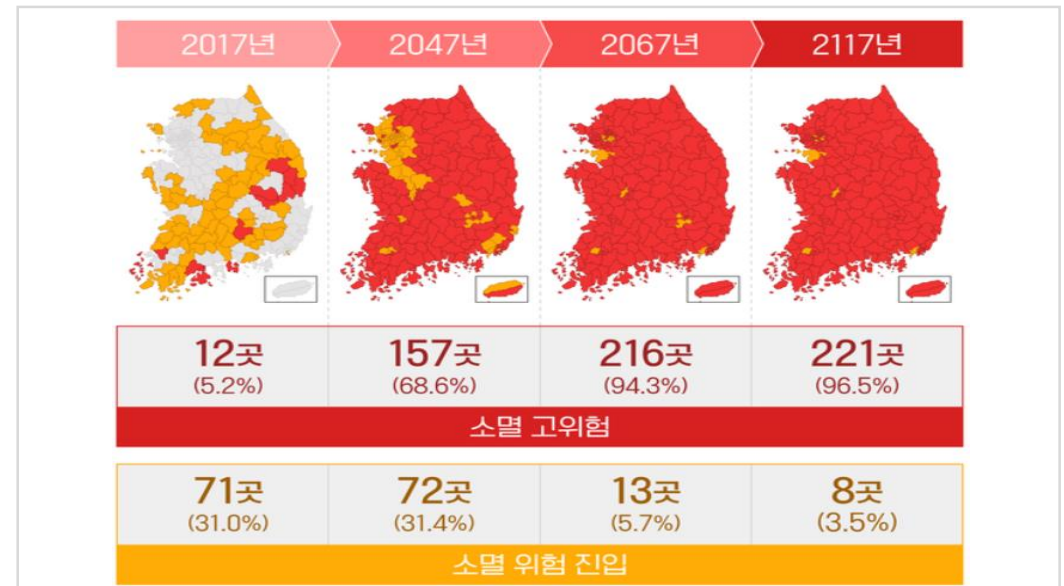
* 소멸위험지역(20~39세 여성 / 고령인구 0.5 미만, 감사원('21)·고용정보원('23)): ('23) 118개 (229개 시군구 중 52%) → ('47) 229개 (100%)

국가채무 및 공공사회복지지출 전망



* 자료: KDI('23), 사회보장 재정추계('20)

지역소멸 전망



* 자료: 감사원('21)

혼인·출산(특히 첫 자녀) 기피·지연

- ☑ '12~'21년 출생아수 변화요인(이철희, '23) [유배우비율 감소(비혼, 만혼)] 48% [유배우 출산율 감소] 41% (첫째아 : 58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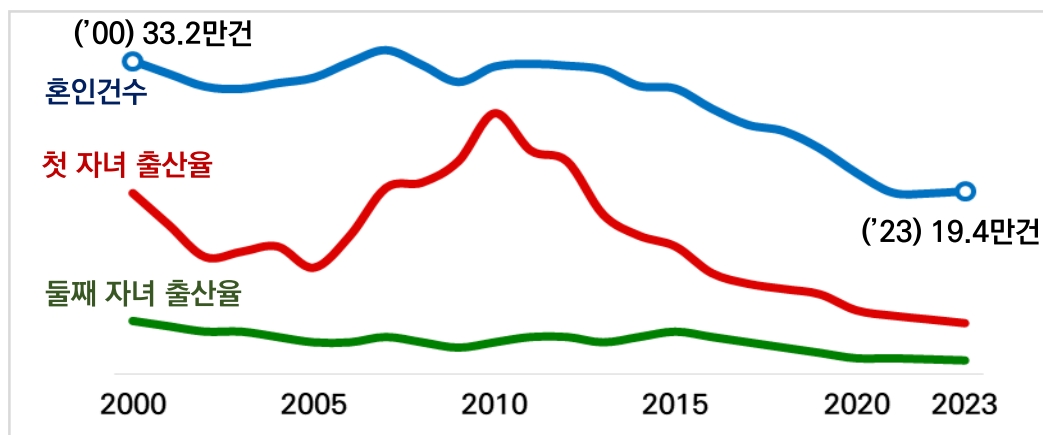
일·가정 상충 下 여성경황 확대

* 일·가정 양립지수: OECD 35위/41개국, 육아휴직 실사용률: OECD 21위/23개국, 남성 육아부담: 22위/24개국

- ☑ '17~'22년 30~34세 여성경황 상승요인(KDI, '23) [유자녀 여성 감소(출산 포기 + 일 선택)] 60% [무자녀 여성 경황 확대] 4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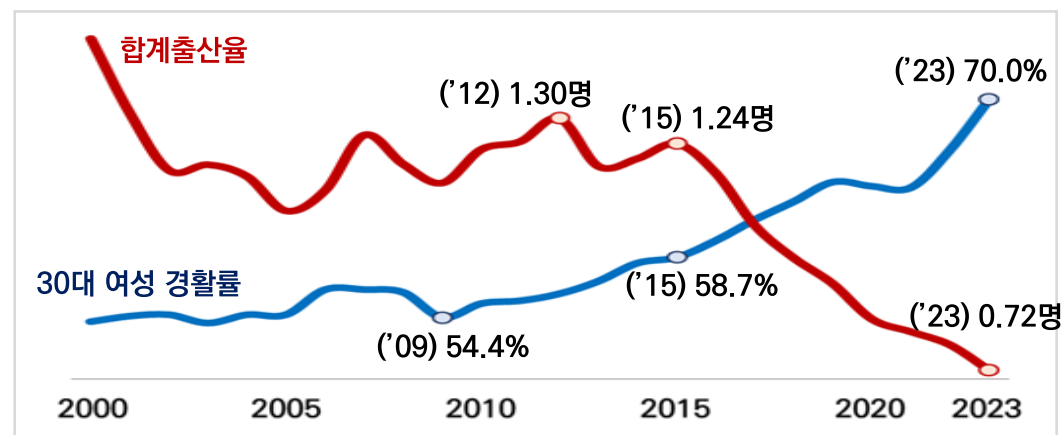
※ OECD 주요국도 '90년대까지는 여성경황 확대로 출산율 ↓ → '02년 이후 일·가정 양립 개선되며 출산율 ↑

혼인 및 자녀별 출산율



* 자료: 통계청, 이철희('23)

합계출산율 및 30대 여성 경황률



* 자료: 통계청

노동 · 교육 · 지역 경쟁압력 가중 + 주거비 상승 + 인식 변화

- ☑ 대·중소기업, 정규·비정규직 간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
→ 중소기업·비정규직 근로자의 결혼·출산 기피

* [노동] 남편·아내 모두 안정된 일자리(상용직+대규모기업)인 경우 출산이행이 원활.
특히 아내가 30인미만 기업 종사시 출산 감소 영향 큼(보사연('21), OECD('22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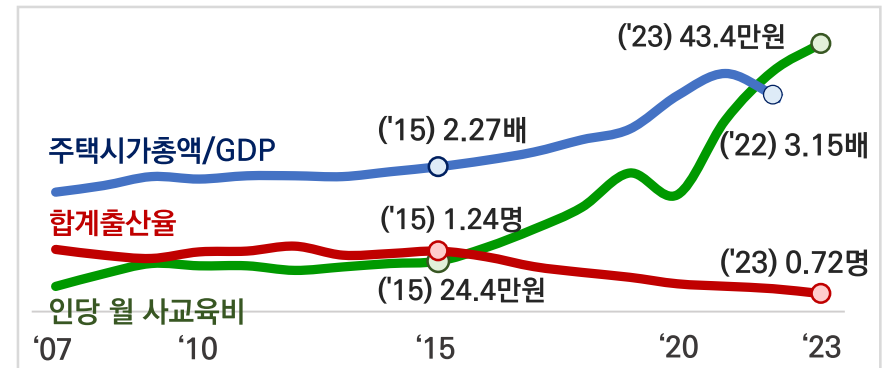
- ☑ 노동시장 이중구조 下 양질의 일자리 경쟁이
교육경쟁, 수도권 집중, 주거비 상승으로 파급되며 저출산 심화

* [교육] '15~'22년 출산율 하락의 26%가 사교육비 상승에 기인(한경협, '23)
[지역] '15년 이후 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 + 인구밀도와 출산율 간 (-)상관관계
[주거비]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높은 가구일수록 출산 가능성 하락(배호중, '19)

- ☑ 결혼·출산에 대한 가치관 및 사회인식 변화 → 가족가치 약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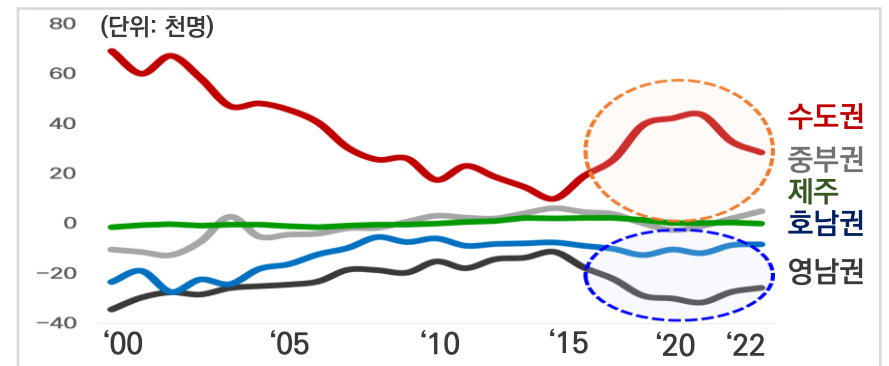
*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중(통계청): ('12)56.5% → ('22)36.4%(10년 전보다 20.1%p 감소)
결혼 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(통계청): ('18)46.4% → ('22)53.5%

출산율-사교육비-주택가격 추이



* 자료: 통계청

권역별 청년(25~34세) 순이동



* 자료: 통계청

기존 정책의 한계와 “다른 차원의 접근” 필요성

중장기전략위원회
중장기전략연구작업반

1차원적 접근 출산율 제고만 초점 → **다차원적 접근** : 출산율 · **경활인구** · **생산성** 동반 제고

경활인구 출산율 제고는 꼭 필요하나 20~30년 후에나 효과, 반면 당장 가용한 여성·외국인 활용 미흡

✓ **여성** 경제활동이 남성 및 OECD 여성보다 현저히 낮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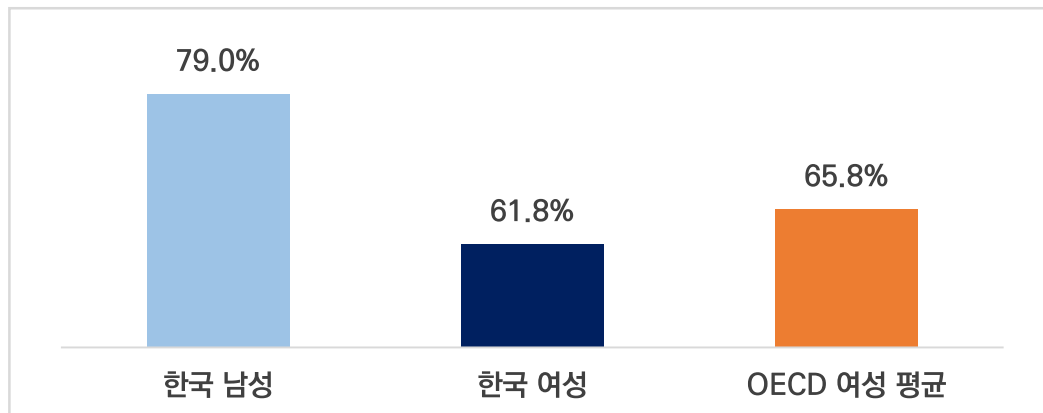
※ 여성 경활률 OECD 평균수준 가정시 15~64세 경활인구 **71.6만명** 증가 ('22 기준)

✓ **외국인** 비중이 주요국 대비 낮고, 특히 전문인력 활용 미흡

* 외국인 전문인력수 증가('12 → '22, 맥킨지): (한국) 5.0 → 5.1만명, (일본) 12.4 → 48.0만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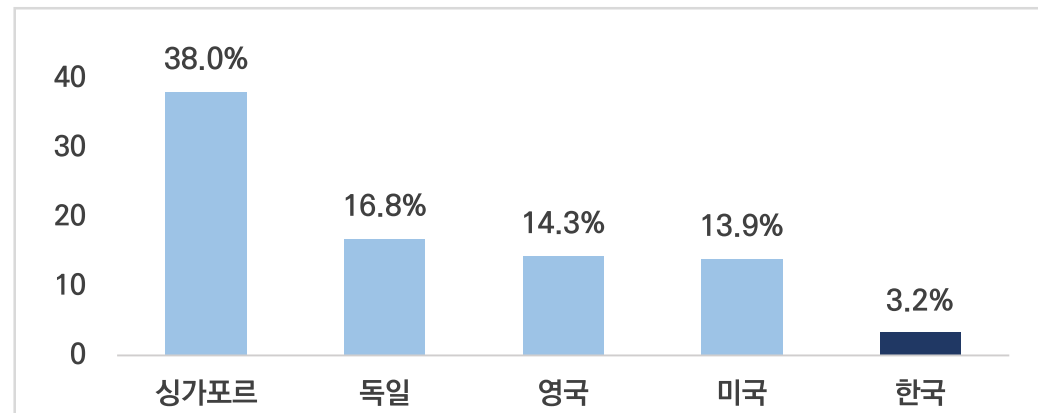
※ 외국인 비중 1%p 증대 시 경활인구 **32.5만명** 증가 ('22 기준)

15~64세 경활률 비교('22)



* 자료: 통계청, OECD

주요국 외국인 비중 비교('22,%)



* 자료: 통계청, OECD 등

생산성 노동부족을 자본·기술로 대체시 높은 성장경로 가능(이종화, '23)

- ✓ **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% 수준**으로 향상(0.7→1.3%)시
'60년 성장률 +0.8%p, 1인당 GDP 증가율 +0.8%p 제고(KDI, '24)
- ✓ AI·로봇 등 **디지털 대전환**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부족 대응 가능
 - 전세계 고용의 약 40%가 AI에 노출, 이중 절반이 AI 활용으로 생산성 향상 기대(IMF)
 - **생성형 AI** 활용은 장기적으로 **생산성을 10~15% 제고** 가능(골드만삭스)
 - 한국이 AI 성공적 도입시 3년내 **GDP의 최대 약 14% 증가** 기대(베인앤컴퍼니)
- ✓ **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경제전반 생산성 향상의 관건**
 - 전체기업 종사자의 81% 차지 → 인구 감소(노동력 부족)에 가장 큰 타격
 - 대·중소기업 생산성 격차(대기업 = 100): (한국) 32.5(대기업의 1/3 수준) (OECD 평균) 52.2
 - **중소기업 생산성을 대기업 절반 수준으로 높이면 '60년 1인당 GDP 40% 이상 성장** 기대(OECD)
 - 저생산성 → 저임금, 인력난, 일·가정 양립 여건 열악 → 저출산 심화

기존 정책의 한계와 “다른 차원의 접근” 필요성

중장기전략위원회
중장기전략연구작업반

피상적 접근 재정·세제 지원만 치중 ➡ **구조개혁 병행** : 노동 · 교육 · 지역 등

- ✓ 가족지출을 OECD 평균수준(GDP대비 1.5→2.1%)으로 확대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(연 11조원 이상, '20 기준)되나, 구조개혁 대비 출산율 제고효과 미미

* OECD 평균수준 개선시 출산율 제고효과(한은, '23): (가족지출 확대) +0.055명 (도시인구집중도 하락) +0.414명 (청년층 고용률 상승) +0.119명

비과학적 접근 실증분석 없이 백화점식 대책 ➡ **과학적 접근** : 저출산 원인 · 효과성 분석 토대로 실효성 높은 과제에 선택과 집중

- ✓ 대책 발표시마다 사업 확대·신설 → 정책실패 반복 + 재정 낭비

미국

- 선진국 중 유일하게 유급 육아휴직 제도가 없고 GDP대비 가족지출 비중도 낮은 수준
- 민간기업 주도로 재택근무 등 일·가정 양립 정착으로 출산율이 OECD 평균 이상

노르웨이

- GDP대비 가족지출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나,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출산율 급락('10년 1.95명 → '22년 1.41명)

독일

- 전일제학교, 하르츠개혁 등 교육·노동 구조개혁과 부모수당 등 가족정책 병행('00년 초반)
→ 출산율 반등('90년 1.45 → '06년 1.33 → '21년 1.58명)

싱가포르

- 상속·증여세 폐지('08년),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도우미 등을 통한 외국인 유입으로 저출산('23년 0.97명)에도 인구 증가('10년 508만명 → '23년 592만명)

OECD

- OECD 국가의 GDP대비 가족지출이 높은 것은 재정지출과 국민부담률 자체가 높은 '고부담-고복지' 모델에 기인

* GDP대비 비중(%): 재정지출('19) (韓)33.9 (OECD)41.8, 국민부담률('20) (韓)28.0 (OECD)33.5

- GDP대비 가족지출과 출산율 간 상관관계는 0.01에 불과('19년 기준 OECD 통계)

	한국	미국	OECD평균	프랑스	노르웨이
가족지출비중('20, GDP대비, %)	1.5	0.7	2.1 ('19년)	2.9	3.2 ('19년)
합계출산율('22, 명)	0.78	1.78	1.56	1.79	1.4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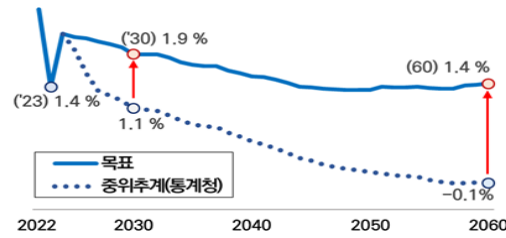
비전

목표

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구축

잠재성장률 제고

30년 1.9%(+0.8%p), 60년 1.4%(+1.5%p)



1인당 소득 증가율 상승

30년 1.8%(+0.6%p), 60년 2.0%(+0.8%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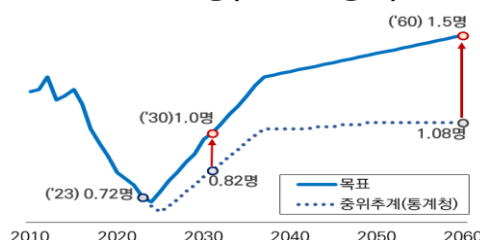
접근

“다른 차원의 접근”: ①다차원적 접근 ②구조개혁 병행 ③과학적 접근(선택과 집중)

3대 차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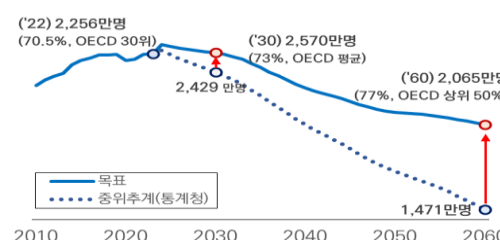
출산을 제고

30년 1.0명(고위추계)
60년 1.5명(OECD 평균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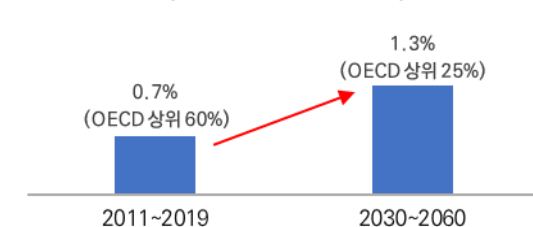
경활인구 확충

30년 OECD 평균 경활률 73%
60년 OECD 상위 50% 경활률 77%



생산성 향상

총요소생산성 증가율 1.3%
(OECD 상위 25%)



7대 과제

- ① 저출산 재정·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② 일·가정 양립 여건 조성 ③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
- ④ 교육 격차 완화 및 미래인재 양성 ⑤ 지방균형발전 ⑥ 중소기업 혁신
- ⑦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

저출산 원인 및 정책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 +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

지출 구조조정

- 저출산 사업 전반에 대해 **재정사업·조세지출 심층평가**를 토대로 **지출 구조조정**
- **저출산 사업 Standstill**: 평가결과 도출시까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**사업 확대·신설 지양**
- 사업 확대·신설은 **절감 재원**으로 추진하는 원칙 정립

현금성 지원 통·폐합

- **현금성 재정·세제 지원***을 통·폐합해 가칭「**가족수당**」 신설 및 지급방식 변경 (月/年→年 통일) 검토
→ 수혜자 지출선택권·정책체감도 제고

* 예: 아동수당, 부모급여, 첫만남 이용권, 자녀장려세제, 자녀세액공제, 출산·입양세액공제

혼인·첫 출산 지원 강화

- **혼인·첫출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방안 검토**
- **신혼·출산가구 비수도권 주거 지원 강화 방안 검토** → 수도권 집중 완화

육아휴직· 출산휴가 제도 재설계

■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현실화

* 현재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44.6% 수준

■ 육아휴직 조기복귀 옵션 (기간 축소 + 인센티브 부여) 도입 중장기 검토 (현행 제도와 조기복귀 옵션 중 선택 가능)

→ 경력단절 예방, 노동시장 이탈 방지, 선택폭 확대

* 유급 육아휴직·출산휴가 기간: (韓) 최대 90.9주(21개월) (OECD 평균) 51.9주 (1년 수준)

* 노르웨이: ①100% 급여·49주 플랜과 ②80% 급여·59주 플랜 중 선택

■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로 전환 사용 허용

→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혜택

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으로 아빠 육아참여 확대

기업의 일·가정 양립 경영 촉진

- **일·가정 양립 우수기업**에 공공구매, 中소 일자리 평가 우대 등 **인센티브** 제공
- **중소·중견기업 유연근무(재택 등)에 대한 컨설팅·인프라·자금지원 지속 확대**

돌봄 체계 효율화

- **어린이집·유치원**: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·돌봄 시간 보장 방안 검토
* (現) 어린이집은 연장보육·유치원은 방과후 과정 운영중이나, 기관별·지역별 운영시간 상이
- **초등돌봄**: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돌봄사업 연계·통합
* (現)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(여가부), 다함께돌봄사업·지역아동센터(복지부) 등
- **가정**: 정부·민간 아이돌봄서비스 **통합바우처** 도입 + 외국인·고령자 등 돌봄인력 공급 확충

“전문인력 이민(정착) - 비전문인력 체류(활용)” 투트랙 접근

전문인력

적극적 “이민” 정책 → 우리사회 정착 유도

- 첨단분야 우수인재, 글로벌 명문대 졸업생 유치 방안 검토

* 호주 - 글로벌인재화 특정산업(첨단제조·우주 등) 인재에게 조건없이 6주내 온 가족 영주권 발급
영국 - 고도인재비자 글로벌 톱50 대학 졸업생들이 2~3년 거주하며 첨단산업분야에 취업 활동

비전문인력

“체류(활용)” 정책: 비전문인력의 전문인력화 및 업종·지역별 활용 확대

유학생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외국인재 유입형(“In-bound”) ODA 사업(장학금) 추진 * 개도국 유학생 국내 유치 + 취업 연계 → 우리 경제 기여 ▪ 외국인 직업계고교생 재학 중 인턴십 허용, 졸업후 구직비자 신설 등 검토
숙련/준숙련인력		장기·성실근속 인센티브 제공
저숙련인력	가사·돌봄	국내체류자(결혼이민자의 가족·유학생 등) 가사·돌봄 분야 취업 허용
	지역특화비자	인구감소지역 → 기회발전특구 등으로 대상 확대
	고용허가제	인력부족 업종 중심 단기 양적 확대(산업 수요-공급 미스매치 해소)

외국인재
유치기반 강화

중장기 외국인재 전략적 활용 로드맵 마련
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구축

초중고

늘봄학교를 통해 초등학생 성장·발달 맞춤형 종합 교육 프로그램 제공

- 방학 포함 1년 내내 모든 초등생에 늘봄 프로그램 등 관련 비용 무상 지원 단계적 확대
- 늘봄지원실 기반의 늘봄학교 전담 조직·인력체계 구축
- 일반교과(국·영·수 등) 보충·심화, 예체능 등 수요 높은 프로그램을 전학년 특성에 맞게 제공

* 초등 1인당 月사교육비('23): 일반교과 24.7만원(영어 11.2, 수학 7.5, 국어 2.5만원 순) > 예체능 및 취미·교양 15.0만원

디지털 교육 대전환 및 교육발전특구 중심으로 교육혁신 확산

- “N명 학생 - N개의 다른 교과서”(AIDT 도입 + 에듀테크 활용) + 미래형 교사 역할 정립(‘teaching’ → ‘coaching’)
- 교육발전특구에 지역이 개선 필요성 제기한 규제에 대해 특례 부여
- 지역대 협약형 특성화고·자율형 공립고 활성화

대학

대학의 자율 혁신 촉진

-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 재정 지원 관련 교육부 권한을 단계적으로 지자체 위임·이양
- RISE 사업 성공을 위해 지자체의 고등교육 정책역량 강화
- 대학 구조개선 지원(대학 재산처분, 통·폐합시 특례부여 등)

가족가치 고양

학교·언론·시민단체·종교단체 등 연계해 가족가치 고양을 위한 교육·캠페인 실시

권역별 거점 육성

- ‘4+3 초광역권 발전전략’의 성과·모범사례 창출을 위해 지자체간 합의 이행 인센티브 제공
- 중복·난립(70여종, 900여 지역)한 특구 정비·효율화, 기회발전특구-교육발전특구-글로벌대학 등 간 연계·시너지 강화
- 균특회계, 지방소멸대응기금,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회계·기금 간 체계적 역할 분담·연계 방안 중장기 검토
- 기회발전특구에 **한시적 규제유예** 및 **규제샌드박스** 적용 분야·기간 우대, 이주·투자 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등 검토
-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: 인구감소·지방소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검토

인구감소에 대응해 생활인구 활성화

- 인구감소지역 3종 프로젝트 제도개선 추진: 생활인구(세컨드 홈 활성화)·방문인구(소규모 관광단지 조성)·정주인구(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)
- 인구감소지역 내 **복수지역 공동·연계 개발** 지원 우대 검토 → 규모의 경제 달성 유도
- 주민 외 체류인구에 ‘**副县长**’ 등록 허용 방안 중장기 검토(독일 복수주소제 등 참고)

디지털 제조혁신

- 디지털 전환 전 단계 지원(수요→역량평가→디지털전환(자동화·스마트화)→사후관리→성과확산→추가 수요발굴)
- 스마트공장 내실화(설비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지원), 제조데이터 표준화·연계 지원(데이터 활용도 제고)

R&D· 인재 양성

- **특허박스*** 中企 중심 확대 검토 * (韓) 특허권 등 이전·대여소득에 대해 세액 감면 (英 등) 지적재산권 관련 수익 전반에 조세감면
- 사내대학(대기업 운영 중인 사내대학에 모든 中企 근로자 입학 허용 등), 대중소상생형 공동직업훈련 확대

중소기업 성장 지원

- 중소기업 졸업시 규제는 급증, 지원은 급감* → **점진구조**로 개편
* (규제) 중기57개→중견183개·대342개 / (지원) 중견기업의 中企 회귀 검토 요인 : ¹순위조세지원 61.6% ²순위판로규제 20.0% ³순위금융지원 15.7%
- 기업규모(매출액·자산 등)에 따른 일률적 지원 기준 → **성장성 지표**(예: 3개년 평균 매출성장률) 추가
- 혁신형 중소·벤처기업 정책금융 확대, 성숙기 기업은 민간금융 중심으로 개편

노동 유연성 제고

- 임금체계 개편 확산: **NCS에 임금정보** 추가(직무급제 도입에 활용), 中企에 적합한 임금체계 인사·노무 컨설팅
- 근로 시간·장소에 유연한 근로계약 확산 → 육아·학업으로 인한 여성·청년 등 퇴직 완화
-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·사·정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**계속고용 활성화** 방안 검토

원·하청 구조 개선

- 업종별 특성에 맞는 상생모델 개발·자율 확산,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지원
- EU 공급망 실사 등에 대비해 원·하청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지원

근로유인 제고

- 노동시장 참여유인 제고
 - (現) 실업 → 노동시장 참여로 전환시 참여세율이 높아*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
 - (改) 기초생보, 고용보험, EITC, 실업급여 등 관련제도가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
 - * 우리나라의 **참여세율**((조세부담+순실업소득 감소분)/총소득)은 110%로, **OECD 최고 수준**(’21년)
- 취약계층: 근로능력에 따른 근로연계 및 소득보장 강화
 - 자활사업·국민취업지원제도 간 연계 강화: 취업역량에 맞춰 자활·구직·취업 원스탑 서비스 제공
 - 기초생보제도: 생계급여 중심으로 일원화 + 보장 강화 검토

감사합니다

